

“尹, 조지호에 ‘국회 들어가는 의원 다 잡아’ 지시”

현재,尹 탄핵심판 9차 변론

국회측, 경찰청장 검찰 조서 공개
윤측 “형사재판 증거는 불법” 항의
현재, 20일 변론 그대로...심리 속도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국회 측은 18일 오후 현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에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아울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진술도 공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했다.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게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이날 현재에서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진술조서에 나타났다.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록됐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계속해서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한다. 다만 현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는 수사기관의 조서

를 증거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오는 20일 탄핵심판 재판 일정을 바꿔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물리쳤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날 “공판 준비기일(형사재판)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은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 당사자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제10차 변론기일의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이 ‘지연 전술’이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지난 15일 현재에 제출해 맞섰다.

현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가 오는 20일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물을 끝내고 1~2차례의 최후 변론을 들은 후 통상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다.

서울·김선욱 기자·연합뉴스

민주당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 공모 6명 등록

전 국회의원·靑 행정관 등 접수 서류 심사 결과·공천 방식 주목

담양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모에 모두 6명이 등록했다.

선거 일정이 조기 대선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고 일정도 빠듯해 후보선정 시기와 공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날 담양군수 재선거 공천자 선정을 위한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6명이 신청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9~20일 서류 심사 결과와 공천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 주자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영덕 전 의원과 친문재인계 인사인 이재중 전 청와대 행정관, 지역 사회에서 잔뼈가 굵은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

장, 김정오 전 담양군의회 의장, 김종진 담양미래전략연구소장, 김용주 전담양군청 과장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사례와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해 경선 후보 심사와 공천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당시 당내 경선 후유증이 심각했던 점, 빠듯한 선거일정을 감안해 전략공천을 진행할 경우 민심 이반과 유력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될 수 있는 점,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

당과의 관계설정 등이 두루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위원장인 4선 이개호 의원도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략공천보다는 공정한 경선을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중앙당에 전달했다”며 “탄핵 심판 일정에 따라 재선거 일정도 바뀔 수 있어 당에서도 선뜻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내 경선 후 본선거에서는 텃밭 민주당 후보에 맞서 3선 군의원인 정철원 의장

이 조국혁신당 후보로 잠정할 가능성이 있고, 김기석 전 담양읍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징검다리 4선 군수’인 최형식 전 군수는 고심 끝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3월13~14일 후보 등록, 3월28~29일 사전투표, 4월2일 본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후보자 등록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대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오지현 기자

제22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5년 4월 20일(일) 오전 8시 출발

대회장소 승촌보

대회코스 승촌보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 가 비 40,000원 (기념품 지급)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5년 4월 3일(목) (선착순)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